

1 관료제 모형에서 베버(Weber)가 강조한 행정 가치는?

- ① 민주성 ② 형평성 ③ 능률성 ④ 대응성

해설

• 베버의 근대관료제 모형에서 강조되는 행정가치는 합법성·합리성·능률성·전문성이다.
 • 대내적으로는 계층제의 집권성과 법과 규칙 중시, 비정의성 등으로 인해 조직구성원의 인간 소외를 초래하고, 대외적으로는 국민의 요구나 사회문제 상황에 신속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기계적·정태적 구조이므로 상대적으로 민주성·형평성·대응성 등은 약화될 수 있다.

답 ③

2 다음은 콕과 로스(Cobb & Ross)가 제시한 의제 설정 과정이다. (가) ~ (다)에 들어갈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 사회문제 ⇨ 정부의제
 ○ (나) : 사회문제 ⇨ 공중의제 ⇨ 정부의제
 ○ (다) : 사회문제 ⇨ 정부의제 ⇨ 공중의제

	(가)	(나)	(다)
①	동원형	외부주도형	내부접근형
②	내부접근형	동원형	외부주도형
③	외부주도형	내부접근형	동원형
④	내부접근형	외부주도형	동원형

해설

☞ 주도집단과 정책의제설정 과정 (R. Cobb, J. Ross, M. Ross)

구 분	외부주도형(Outside Initiative Model)	동원형(Mobilization Model)	내부접근형(Inside Access Model)
의제설정단계	사회문제 ⇨ 공중의제 ⇨ 정부의제	사회문제 ⇨ 정부의제 ⇨ 공중의제	사회문제 ⇨ 정부의제
문제전환 방향	환경(외부) ⇨ 정책결정자(내부)	정책결정자(내부) ⇨ 환경(외부)	양자 간 관계없음(내부 ⇨ 내부)
주도자	외부의 일반국민이 주도 비공식적 참여자 주도	내부의 최고정책결정자가 주도	내부의 주요 고위관료들이 주도
공개성·참여	높음	중간	낮음
사회특징	민주적 평등사회, 다원주의 사회 주로 선진국	관료적 계급사회 주로 후진국(선진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	통제적 불평등 사회(부·권력의 편중)
의제화 용이성	정책의제화 곤란(의사결정비용 많음)	정책의제화 용이(의사결정비용 작음)	
집행의 용이성	정책집행 용이(집행비용 적음)	정책집행 곤란(집행비용 많음)	
공중의제화	확산단계	진입단계	없음
정부의제화	진입단계	제기단계	제기단계
특 징	• 강요된 정책문제(pressed issue) • 정책내용이 비분석적·비체계적임 • 다수의 이해관계 조정·타협 • 공익-과장설, 점증주의, 포자모형	• 선택된 정책문제(chosen issue) • 정책내용이 분석적·체계적임 • 소수의 결정과 적극적 공중의제화전략- 행정 PR과 동원 활용	• 공중의제화(행정PR·동원) 없음, 일반국민에게 알리지 않음 • 내부적 흥정 : 정치자금의 제공, 특정인사의 보장
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1987년 6·29선언, 복수노조 인정, 교원노조 허용, 1965년 한일어업협정, 군필자 가산점 위헌판결, 그린벨트 해제, 지방자치 실시, 벤처산업육성, 개방형임용제, 전자상거래 등	4대강사업(이명박), 도로명주소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새마을운동, 가족계획사업,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올림픽·월드컵유치, 제2의 건국운동(김대중), 경차보급운동, 경부고속도로 건설, 경부고속전철 건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제도 확대 실시, 그린벨트 지정, Jhonson정부의 빈곤퇴치사업.	기업정리시 인수자 선정, 관허사업자 선정, 외교·국방정책(차세대전투기사업 등 무기구매계약, 금강산관광, 대북지원사업), IMT(무선영상이동전화) 2000 기술개발 및 상용화 계획, 마산수출자유지역 결정.
단 계	제 기 (주도)	환경에서 논제 제기 (개인·집단의 고충 표명)	정부 내에서 논제 제기 ⇨ 정부의제화 (정책결정자가 새로운 정책을 공표)
	구 체 화	매스컴·이익집단 등이 논의를 구체화(고충을 구체적인 정책적 요구로 전환, 대안의 제시)	정부가 구체화 (공표된 정책의 세부 항목 결정)
	확 산	다른 환경집단에게 논제의 중요성을 인식시킴 ⇨ 공중의제화(대중매체·상징 활용)	관주도 하에 공중에 정책의 중요성·유용성을 인식시킴(대중매체·상징 활용)
	진 입	공중의제의 정부의제화 (정부기관의 관심 표명)	정부의제의 공중의제화 (정책에 대한 공중의 지지 표명)

답 ④

3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인적 구성이 사회의 인구학적 특성과 비례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대표관료제를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
- ②엽관주의는 정당제도 유지에 기여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오늘날에도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 ③실적주의는 엽관주의의 폐해와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복잡해짐에 따라 공무원들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지면서 정당성이 강화되었다.
- ④엽관주의에 따른 인사는 관료기구와 집권 정당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정부가 공무원의 충성심을 확보하고 공무원을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다.

해설

- ① (×) 공무원의 인적 구성이 사회의 인구학적 특성과 비례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의 한계(형식적 기회균등, 소외계층에 대한 낮은 대응성)를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 실적주의 인사제도의 경우 교육에 대한 기회균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개경쟁채용시험제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가 없어 고소득·고학력 계층 자녀만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공직취임의 실질적 기회균등이나 정부관료제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이다. 대표관료제는 정부관료제가 사회의 인적구성을 반영하도록 구성하여, 관료제 내에 민주적 가치를 주입시키고, 실적주의 하에서 강조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아닌, 적극적인 정치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였다.
- ② (○) 고위공무원의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늘날에도 부분적으로 정치적 임용방식이 허용된다. 우리나라는 정무직과 별정직의 많은 직위, 단순 노무종사자 등에 대한 엽관주의적 공직 임용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음(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공식적인 인사정책으로 채택한 적은 없음).
- ③ (○) 실적주의의 등장배경 : ㉠ 엽관주의의 폐해, 정당정치의 부패, 정당의 대표성 약화, ㉡ 산업사회화와 19C말 행정국가화(행정의 양적 확대와 질적 복잡·전문화)에 따른 전문행정가 필요, ㉢ 시민의 정치의식수준의 향상과 행정능률화의 요청, 공직개혁운동.
- ④ (○) 엽관주의는 동일한 정치이념을 지닌 자들로 공직이 구성되어 정책의 강력한 추진과 실현이 용이하므로 정책수행 과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고 정치적 변혁이나 중요한 정책변동에 유리하다. 또한 공무원의 적극적 충성심을 확보하고, 공무원을 더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어 최고관리층의 리더십을 강화시킨다.

답 ①

4 예산 분류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의 기능별 분류의 단점은 회계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 ② 예산의 조직별 분류의 장점은 예산지출의 목적(대상)을 파악하기 쉽다는 점이다.
- ③ 예산의 기능별 분류의 장점은 국민이 정부 예산을 이해하기 쉽다는 점이다.
- ④ 예산의 품목별 분류의 단점은 예산집행의 신속성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해설

- ② (×) 예산지출의 목적(대상)을 파악하기 쉬운 분류는 기능별 분류. 조직별 분류나 품목별 분류는 경비지출 목적, 사업 성과, 사업간 우선순위 등을 파악하기 곤란함.

☞ 예산의 특징별 분류기준

전통적 분류 (합법성)	프로그램 중심 현대적 분류 (효율성)	의회의 예산심의 용이	총괄 계정에 적합	회계책임 명확 재정통제 용이	예산의 국민경제적 효과 파악	시민을 위한 분류, 사업계획 수립 용이	예산집행 용이, 가장 일반적인 분류	다른 분류와 함께 쓰이는 빈도 가장 높음	다른 분류가 반드시 병행 되어야 함
조직별 품목별	기능별(사업계 획별·활동별)	조직별 기능별	기능별 조직별	품목별 조직별, 활동별	경제성질별	기능별	품목별	품목별	경제성질별

☞ 예산 분류 유형별 장·단점

방식	장 점	단 점
품목별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비지출 주체를 명확히 하여 회계책임의 확보에 유리 ② 국회 예산심의 가장 용이(의회 상임위원회가 조직별로 구성되므로) ③ 예산 유통과정이나 단계의 명확화 ④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예산 통제의 효과적 수행 ⑤ 분류범위가 비교적 크고 융통성이 있어 총괄계정에 적합 ⑥ 집행 주체별로 구분되어 예산 집행이 용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비지출의 목적 파악 곤란 ② 사업 간 우선순위 파악 곤란 ③ 조직 활동의 전반적 성과 파악 곤란 ④ 예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악 곤란
조직별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회계책임 명확화, 재정통제 용이, 회계검사 용이 ② 지출의 합법성 확보, 공무원의 재량범위를 줄여 부정 방지 ③ 인건비(보수·수당)가 별도 항목으로 구성되어 이를 통해 정원·현원 관리 등 인사행정에 유용한 정보제공 ④ 사업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이익집단의 저항을 피할 수 있는 정치적 이점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투입에 초점을 두므로 사업과 지출에 따른 성과·효과 파악 곤란, 경비지출의 목적 파악 곤란 ② 사업 간 우선순위 파악 곤란 ③ 예산의 신속성 저해, 지나친 세(細)분류로 red-tape 초래 ④ 경제분석·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제공 못함 ⑤ 세목별 분류이므로 총괄계정에 부적합 ⑥ 신규 사업보다 기존 사업 확대에 치중한 점증주의방식 ⑦ 예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악 곤란

기능별 분류	① 국민의 이해가 용이(시민을 위한 분류) ② 정부의 사업계획 및 정책 수립 용이 ③ 대분류로서 포괄성·탄력성이 높아 총괄계정에 가장 적합 ④ 집행의 신속성·효율성 제고 ⑤ 국회의 예산심의 용이(의회 상임위원회가 기능별로 구성) ⑥ 정부 산출의 효과, 산출량, 생산성 등의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에 유리	① 하나의 정부사업이 여러 기능에 중복되는 경우가 많음 ② 대항목은 여러 부처를 포괄하므로 부처별 사업 파악 곤란, 정부예산의 유통 과정 파악 곤란. ③ 지나친 융통성으로 인해 의회에 의한 예산통제가 곤란하고 구체적 항목에 대한 기록이 없어 회계책임 확보 곤란. ④ 세입예산에 활용 곤란(세출예산에만 적용) ⑤ 예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악 곤란
경제성질별 분류	① 정부예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악 ② 경제정책 및 재정정책 수립 용이 ③ 정부활동의 경제적 효과(국민소득·자본형성 등) 분석 용이 ④ 국가경제구조 이해, 국민경제동향 파악 ⑤ 국가 상호 간 예산경비의 비중에 대한 비교 용이 ⑥ 경제안정과 경제성장 촉진	① 예산의 구체적 집행기준이 못됨-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일선공무원에게는 무용,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에게만 유용. ② 타 분류법과 병행 활용 필요(개별적으로 사용 곤란) ③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영향을 일부만 근사치로서 측정할 뿐임 ④ 소득배분에 대한 영향 파악이나 산업부문별 분석은 곤란 ⑤ 세입·세출 이외의 요인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곤란

답 ②

5 다음에서 제시하는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정책의 본질이 미래지향적 문제 해결에 있고, 정책결정에서 가치비판적 발전관에 기초한 가치지향적 행동 추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 기존 정책이나 사업의 매몰비용으로 인해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환류되는 정보를 분석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수정·보완하는 방식이다.
- ② 문제성 있는 선호(problematic preferences), 불명확한 기술 (unclear technology), 일시적 참여자(part-time participants)가 전제조건이다.
- ③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타협을 통한 봉합을 모색한다.
- ④ 같은 비용으로 최대의 목표산출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해설

- 제시된 내용은 합리모형이다. 합리모형은 의사결정자들이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일련의 목표들을 설정할 능력이 있다고 가정한다. 의사결정자는 ㉠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 명확한 목표를 세워, ㉢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대안들을 체계적·포괄적으로 탐색하고, ㉣ 각 대안들의 결과를 가능한 모든 정보를 동원하여 분석·예측한 후, ㉤ 각 대안들의 결과를 체계분석(BC분석, EC분석) 등에 의해 체계적으로 비교·평가하여(객관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 대안 선택기준에 따라 목표달성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본다.
- **창조적 탐색과 가치비판적 발전관**
 - **점증주의적 대안 탐색**: 기존의 정책을 토대로 하여 그 정책을 약간 수정하거나 변화를 주어 정책을 발견하는 방법
 - **창조적 대안 탐색**: 기존의 정책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수단을 독자적으로 만드는 방법. 가치비판적 발전관을 전제로 함.
 - **가치 비판적 관점**: 낙관적 관점,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 비판적 진단 자세, 창조적 처방 능력.
- 오늘날 지식정보사회와 같이 복잡하고 가변적인 시대에 발생하는 정책문제들 중에는 발상의 전환이나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들이 많으며, 이러한 정책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의 창조적 탐색이 요청된다. 정책대안의 탐색·개발은 이미 시행되었거나 현재 시행되고 있어 이미 알려져 있는 기존 대안들(정책목록: policy program repertory) 중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및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탐색활동뿐 아니라 새롭고 창의적인 대안의 개발과 설계활동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책대안의 탐색·개발의 핵심은 '탐색'이며 탐색은 창조적 탐색(기존의 정책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수단을 독자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되어야 하고 이는 가치비판적 발전관을 전제로 한다.
- 가치비판적 발전관을 갖추려면 다음과 같은 창조적 사고가 필요하다.
 - ㉠ 세상의 모든 것은 그것이 무엇인가에 상관없이 과거·현재의 것보다 더 바람직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낙관적 관점
 - ㉡ 과거, 현재의 것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 찾아낼 수 있고 하나의 이상적인 모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이성에 대한 믿음
 - ㉢ 설계된 이상적 모형에 입각하여 과거 상황과 현재 상황을 비교·평가함으로써 기존의 것의 모순과 결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비판적 진단 자세
 - ㉣ 과거, 현재의 것이 이상적 모형으로 향상·발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실천방안을 강구하는 창조적 처방 능력
- 합리모형은 기존정책에 대한 매몰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므로(기존 정책에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든 정책종결 가능), 매몰비용이 크고 이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 ① (x) 사이버네틱스모형의 특징. heuristics(자기발견식/시행착오/적응·학습)을 활용하는 인지모형 계열(만족·점증·회사·사이버네틱스모형)은 정형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알고 algorithm을 활용하는 합리모형과는 비교됨.
 - ② (x) 쓰레기통모형의 특징
 - ③ (x) 회사모형이나 앨리슨의 모델 II (조직과정모형)의 특징
 - ④ (○) 전지전능하며 포괄적 합리성을 지닌 합리인을 전제로 경제적·기술적 합리성 차원에서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합리모형과 관련됨.

답 ④

6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종합편성 채널의 운영권을 부여하고, 이를 확보한 방송사에 대한 규제는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의 보호적 규제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네거티브 규제(negative regulation)는 포지티브 규제(positive regulation)보다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피규제자가 선호하는 방식이다.
- ③ 우리나라는 신기술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샌드박스제도를 도입하였다.
- ④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이론에 따르면, 대체로 경제적 규제는 고객정치의 상황으로 분류되며 사회적 규제는 기업가정치의 상황으로 분류된다.

해설

① (x) **경쟁적 규제정책**: 다수의 경쟁자 중에서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일정한 재화나 서비스, 권리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익을 위해 서비스 제공의 일정한 측면을 규제하는 정책. **보호적 규제정책과 배분정책이 혼합된 혼합정책(Hybrid Policy)**의 성격. 지문에서 종편채널 운영권부여(배분정책) + 방송사 규제(보호적 규제정책)

② (o) **규제의 개입 범위: 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

구분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네거티브(negative) 규제
특징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사전규제 예 주로 허가제·인가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사후규제 예 주로 신고제·등록제
법 규정 형식	~할 수 있다. ~이다. -허용 사항 명시 (특정 행위만 허용, 나머지는 금지)	~할 수 없다. ~가 아니다. -금지 사항 명시 (특정 행위만 금지, 나머지는 허용)
입증책임	피규제자가 규제법규 준수를 입증	규제기관이 규제법규 위반을 입증
효과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더 제약됨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더 보장됨

③ (o) **규제샌드박스**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 2016년 영국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개국에서 운영중인 제도. 아이들이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의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 기술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을 미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내용	<p>실증특례를 중심으로 임시허가와 신속확인 제도 연계 운영 : 외국은 '실증특례' 방식으로 운영. 우리나라는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임시허가', 규제유무를 부처가 확인하여 기업에게 알려주는 '신속확인'도 추가 운영.</p> <p>실증특례 :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의 근거 법령에 기준·요건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서의 실증 테스트를 허용.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부는 관련 법령 정비.</p> <p>임시허가 : 신기술로 인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우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고 관계 당국은 관련 규제를 개선.</p> <p>신속확인 :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이 규제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속확인을 신청하면 규제부처가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함. 특히, 규제부처가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p>

④ (o) 고객의 정치는 주로 인허가제에서 나타나므로 경제적 규제인 진입규제와 주로 관련됨
기업가적 정치는 주로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한 규제, 환경오염규제 등에서 나타나므로 사회적 규제와 주로 관련됨.

J. Q. Wilson의 규제정치모형

		감지된 규제의 편익(수혜자집단)	
		높은 수준으로 집중(특정 소수)	낮은 수준으로 분산(불특정 다수)
감지된 규제의 비용(비용부담집단)	높은 수준으로 집중(특정 소수)	이익집단정치(interest - group politics) 예) 의·약분업, 한·약규제, 노사관계규제, 중소기업고유업종규제	기업가적 정치(entrepreneurial politics ; 운동가의 정치) 예) 환경오염규제, 자동차안전규제, 산업안전규제, 유해성 물품에 대한 위생규제, 원자력발전 안전규제
	낮은 수준으로 분산(불특정 다수)	고객의 정치(client politics) 예) 진입규제(의사·변호사 등 직업면허, 인·허가제도), 농산물 최저가격규제, 수입규제	대중정치(majoritarian politics ; 다수의 정치) 예)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낙태·종교활동에 대한 규제, 신문·방송·출판물 등 언론에 대한 윤리규제, 사회보장법, 음란물 규제,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등

규제의 영역 : 경제적 규제, 독과점 규제, 사회적 규제

구 분	경제적 규제(광의)		사회적 규제 (Social Regulation)
	경제적 규제 (Economic Regulation)	독과점 규제 (Antitrust & Unfair Trade Regulation)	
개 념	①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정부규제 : 기업 설립, 개인사업 개시, 제품·서비스 가격, 생산량, 품질, 거래상대방과 거래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한 의사결정 및 관련 행위에 대한 규제 ② 동일산업에 속한 기업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약. (진입규제는 기존 기업과 신규 참여희망 기업의 경쟁을 제약하고, 가격·품질 규제는 기업들의 가격경쟁·품질경쟁을 제한함)	①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는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정부규제로서 진입, 가격, 생산량, 품질, 공급대상 및 조건 등을 직접적 규제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경제적 규제와 일치. ② 시장경쟁은 제약하기보다는 시장경쟁을 발달하거나 시장경쟁 하에서와 비슷한 시장성과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점에서 일반적인 경제적 규제와 대비됨.	① 기업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규제 : 환경오염, 근로자의 보건·안전에 대한 위협, 소비자 권익 침해,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등 기업의 행위가 기업 내부적으로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영향을 미칠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횡포를 막기 위한 규제 ②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각종 위험증대에 대응해 등장한 현대적 규제
종 류	① 가격규제 : 최고가격규제, 최저가격규제, 가격구조규제 ② 진입규제 : 사업 인·허가, 희소자원의 분배, 직업면허, 특허, 수입규제 등 ③ 퇴거규제(퇴출규제) : 특정 지역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사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것 ④ 기타 품질, 생산량, 공급대상, 조건, 방법 등에 대한 규제	①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② 합병(기업결합)의 규제 : 주로 수평적 결합(동종업체 간 합병)을 강하게 규제 ③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제한 ④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공해규제와 환경보전 ② 소비자보호규제 : 의약품규제, 식품안전규제, 자동차안전규제, 소비자보호정책의 종합적 추진 등 제조물책임제 시행 ③ 작업장안전과 보건규제 : 산업재해보상, 산업안전보건 ④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 고용·임금의 남녀차별, 장애자 고용차별, 학력·출신지역에 따른 차별 등에 대한 규제

답 ①

7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생태론적 접근 방법은 외부 환경이 행정체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으로 환경에 대한 행정의 주체적인 역할을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② 후기행태주의는 적실성(relevance)과 실천(action)을 강조하고,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연구보다는 가치평가적인 정책연구를 지향하였다.
- ③ 공공선택이론은 권한이 분산된 여러 작은 조직들에 의해 공공서비스가 공급되는 것보다 단일의 대규모 조직에 의해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선호한다.
- ④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경로의존성과 관성적인 성향으로 인해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해설

- ① (○) 생태론은 행정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는 개방체제적 시각이지만 준개방체제관으로서 행정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행정의 종속변수성만 인정하고 독립변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생태론적 결정론(환경결정론)의 시각이다. 따라서 행정의 적극성·주체성·자발성·능동성을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② (○) 1969년 이스턴(D. Easton)의 「정치학의 새로운 혁명」 - 후기행태주의(post-behavioralism)의 시작을 선언하고, 그 성격을 '적실성의 신조(credo of relevance)'와 '실행(action, 행동·실천)'으로 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의 정책결정기능(가치판단) 중시. 가치주의, 주관주의, 반논리실증주의, 규범주의 시각.
- ③ (×) 공공선택이론은 단일의 대규모 조직에 의해 공공서비스가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것보다 권한이 분산된 여러 작은 조직들에 의해 공급되는 것을 선호한다.

오스트롬(Ostrom) 부부의 민주행정 패러다임 : 오스트롬은 전통적 행정학의 Wilsonian-Weberian Paradigm을 비판하고 민주행정 패러다임을 제시. 관료도 일반인처럼 자기이익을 추구하며, 권한이 분권화나 통제되지 못할 경우 악용 우려가 있으므로, 다양하고 상이한 조직장치들이 공공재 공급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고 봄.

구 분	전통적 행정관(Wilsonian - Weberian Paradigm)	Ostrom의 민주행정관
권력 체계	단일한 권력 중추 존재(권력 집중) 권력은 분산될수록 무책임해진다.	다양한 권력 분산 장치(권력 분산) 권력이 집중될수록 권력의 낭비가 심해진다.
행정과 정치	행정의 목표와 과업은 정치에서 결정되며, 행정은 정치와 분리된 존재 - 정치행정2원론	행정은 정치의 영역 내부에서 이루어지며 행정과 정치를 구분해서는 안 됨 - 정치행정1원론
행정 관료	윤리적 판단자(공익 추구자) 단일 권력 중추에 의한 완벽한 행정통제	윤리적 판단자가 아님(실수 가능) 정부 관료도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부패 가능
공공 서비스 (관료제)	계층구조에 의한 일방적 공급(완전한 계층제적 조직) 계층제적 조직의 완성은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 행정기능·조직 관련하여 모든 국가는 강한 구조적 유사성을 지님	권력분산과 관할권의 중첩에 의한 공급(다중공공관료제) 계층제적 조직의 완성은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못함. 다양한 행정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다양한 조직구조 사용 가능
결론	위 조건을 충족하는 "좋은"행정의 완성이 인류문명과 인류복지 증진의 필요조건.	다수의 중첩적 관할권, 다양한 의사결정 단위의 잠재적 거부권(veto power) 보유는 다중심적·안정적 정치체제 유지와 인류복지 증진의 필요조건

- ④ (○) 제도의 지속성과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 의도하지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
- ㉠ 경로의존성 : 제도가 한 번 형성되면 사회환경 변화와 새로운 기능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을 띠며, 미래의 선택과 변화 방향을 제약. 그 결과 한 국가제도의 역사발전은 일정한 경로를 가지며, 새로운 투입이 발생해도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와 유사한 선택을 하는 '경로의존성'이 나타남(제도의 자기 강화와 긍정적 피드백).
 - ㉡ 비효율적·비합리적 제도의 인정 : 특정 정책 또는 경로가 한 번 선택되면, 나중에 문제 해결에 더 효율적이며 기능적인 제도가 있더라도 기존 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향이 있음(불합리한 제도의 지속 이유 설명). 새로운 환경에 유연하게 변화하지 못하고 과거의 모습을 유지하려 하므로 새로운 시점에서의 문제해결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하고 비효율성을 초래하기도 함. 결국 제도란 주어진 상황에 가장 적합하게 기능하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원래 의도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비효율성·비합리성을 인정.

답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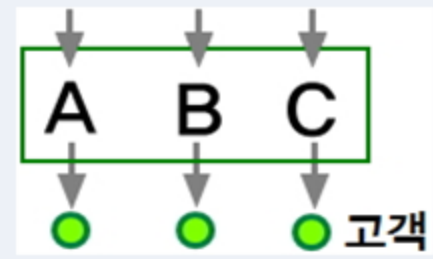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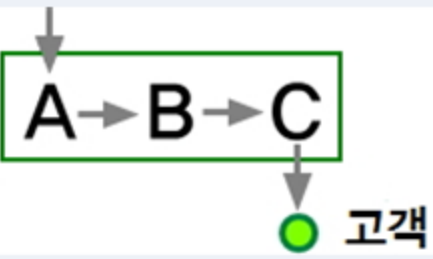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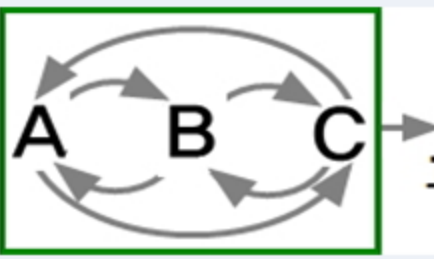
8 톰슨(Thompson)의 기술 분류에 따른 상호의존성과 조정 형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집약형 기술(intensive technology) - 연속적 상호의존성(sequential interdependence) - 정기적 회의, 수직적 의사전달
- ② 공학형 기술(engineering technology) - 연속적 상호의존성(sequential interdependence) - 사전계획, 예정표
- ③ 연속형 기술(long-linked technology) - 교호적 상호의존성(reciprocal interdependence) - 상호 조정, 수평적 의사전달
- ④ 중개형 기술(mediating technology) - 집합적 상호의존성(pooled interdependence) - 규칙, 표준화

해설

- ① (×) 집약형 기술(intensive technology) - 교호적 상호의존성 (reciprocal interdependence) - 상호 조정, 수평적 의사전달
- ② (×) 공학형 기술(engineering technology)은 페로우(C. Perrow)의 기술유형론에 속함.
- ③ (×) 연속형 기술(long-linked technology) - 연속적 상호의존성(sequential interdependence) - 사전계획, 예정표(planning and scheduling)

■ 톰슨(J. Thompson)의 기술유형론 - 기술의 상호의존성

구 분	중개적 기술 (mediating technology)	길게 연결된 기술(연속형 기술) (long-linked technology)	집약적 기술 (intensive technology)
의 미	상호의존상태에 있거나 서로 의존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을 연결하는 기술. 단위부서 간 과업 관련성은 없음.	여러 활동이 순차적 의존관계에 있을 때 사용하는 기술(A부서 산출물이 B부서 활동의 투입이 됨)	특정 대상물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모든 다양한 기술의 집합체. 개별 고객의 성격·상태에 따라 다르게 배합되는 기술.
예	은행(예금자-대출자 간 연결) 직업소개소, 공인중개사	대량생산조직 - 연속적 공정(화학공정), 컨베이어 시스템, 조립라인	맞춤기술·주문기술(종합병원에서의 치료, 건축업)
상호 의존성	집합적(공동적·집단적; pooled) 상호의존성  상호의존성 가장 낮음 일방향 집중형 - 상호독립적 (예 은행직원의 저축상품 판매업무)	순차적·연속적(sequential) 상호의존성  상호의존성 높음 연쇄고리형(선후관계로 연결)	교호적·호혜적(reciprocal) 상호의존성  상호의존성 가장 높음 쌍방향 상호의존형 (모든 업무담당자가 협력해 생산)
조정방법	표준화(standardization), 규정·절차	계획·예정표(planning and scheduling), 피드백	상호적응(mutual adjustment), 부서간 회의, 팀워크·협력 * 표준화 곤란
갈등·조정	갈등 낮음(조정 용이, 조정비용 낮음)	갈등 중간(조정 곤란도 중간)	갈등 높음(조정 곤란도 높음, 조정비용 높음)
생산비용	낮음	중간	높음
복잡성·공식성	일상적 기술 : 복잡성 낮음, 공식성 높음	복잡성·공식성 중간	비일상적 기술 : 복잡성 높음, 공식성 낮음
추가적 방법	전담직위로 참모 설치	위원회 설치	Project Team, Task Force

답 ④

9 공무원고충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다루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가 관장한다.
- ② 고충처리대상은 인사·조직·처우 등의 직무조건과 성폭력범죄, 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상문제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한 법적 기속력이 있지만,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한 법적 기속력이 없다.
- ④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 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고 그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해설

① (○)

구분	중앙고충심사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	인사혁신처의 소청심사위원회가 관장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설치
관할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 ②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 포함)·연구관·지도관·전문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 심사 ③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고충으로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함이 부적당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사안 : ㉠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에 관한 고충,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로 인한 고충, ㉢ 그 밖에 성별·종교·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고충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및 고충 심사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고충 처리)

- ④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⑤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다만,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고충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에 관한 고충 등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한 사안이거나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원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급 상급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할 수 있다.

② (○)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2조(고충처리대상)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 조건과 관련된 신상 문제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신상 문제와 관련된 고충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 ① 근무조건 : 봉급·수당 등 보수, 근무시간·휴식·휴가, 업무량·작업도구·시설안전·보건위생 등 근무환경, 주거·교통 및 식사편의 제공 등 후생복지
- ② 인사관리 : 승진·전직·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교육훈련·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상훈·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근무성적평정은 소청심사 청구대상이 아니지만 고충처리 대상에는 포함됨
- ③ 성폭력범죄·성희롱
- ③ 기타 신상문제 : 성별·종교·연령·장애 등에 의한 차별대우, 기타 개인의 정신적·심리적·신체적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③ (○) 고충심사위원회 결정의 효력 : 권고적인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필요한 조치의 요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행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을 받아 내려면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기속력을 가짐.

■ 고충심사제도와 소청심사제도

구분	고충심사제도	소청심사제도
행정소송	행정소송 불가 - 행정소송의 전심절차가 아님	행정소송 가능 - 행정소송의 전심절차(특별행정심판)
심사 대상	• 근무조건·인사관리·신상문제 등 직무 관련 모든 문제(범위 넓은) • 추상적 심리적 상태의 불만으로도 청구 가능	•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신분상 불이익처분에 한함 - 범위 좁음) • 직접적 구체적 이익의 침해가 있어야 청구 가능
청구기한	제기기간 제한 없음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의 재심청구는 30일 이내)	•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불리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결정	• 고충심사위원회(상대적으로 낮은 독립성 요구) -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결정 :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 -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결정 : 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	• 소청심사위원회(높은 독립성 요구) -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결정(단, 중징계 처분의 취소·변경과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 확인의 경우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합의로 결정)
결정기한	30일 이내 결정(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60일 이내 결정(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결정의 효력	법적 기속력 없음	법적 기속력 있음

④ (×)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결정 :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결정 :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7조(고충심사절차)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10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및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등”이라 한다)의 결정은 제3조제7항 전단, 제3조의2제7항 전단, 제3조의3제7항 전단 또는 제3조의4제6항 전단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 ②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원(「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말한다)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10 프레스먼(Pressman)과 윌다브스키(Wildavsky)의 성공적인 정책집행에 관한 오클랜드 사례분석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집행에 개입하는 참여자의 수가 적어야 한다.
- ② 정책집행은 정책결정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③ 정책집행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가 단순해야 한다.
- ④ 최초 정책집행 추진자 또는 의사결정자가 지속해서 집행을 이끌어야 한다.

해설

② (x)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연속적 과정이고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프레스먼(J. Pressman)과 윌다브스키(A. Wildavsky)의 연구(집행론 ; Implementation, 1973)

의의	'Great society' 건설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의 실패이유를 오클랜드(Okland)사업의 집행과정분석으로 밝혔고, 당시 미국 전역에 문제시되던 정책실패 현상 속에서 집행연구의 폭발적 증가의 배경이 됨.
정책 실패 원인	① 집행과정상 참여기관·참여자의 과다 : 동의를 얻어야 하는 다수의 의사결정점(decision points)이 거부점(veto point ;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으로 작용하여 집행이 곤란함(많은 중간매개집단과 공동행동의 복잡성). ② 핵심 집행담당자(리더)의 잦은 교체로 인해 집행에 대한 기존의 지지·협조를 붕괴시킴. ③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목표달성에 부적절한 정책수단 선택(직접적 수단보다 간접적 수단 선택) ④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 타당한 인과모형의 결여. ⑤ 부적절한 정책집행기관(담당기관인 경제개발처는 불황시 경기회복을 담당하던 기관이었으나 당시 오클랜드시는 흑인들만 실직이 많았을 뿐 전반적인 호황 상태였음)
결론	①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연속적 과정이고 분리되어서는 안 됨. ② 정책결정자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 수단도 강구해야 함. 결정 후 정책집행을 여러 기관에 방치하지 말고 전담기구 창설.
처방 제시	③ 의사결정점(decision points)을 줄이기 위해 정책은 가급적 단순화 ④ 정책목표와 수단간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함. 타당성 있는 이론에 기반하고 실현가능성 있는 정책내용이 정책설계시 결정되어야 함.

답 ②

11 다음 중앙인사기관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수반이 인사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며, 인사기관의 장은 행정수반을 보좌하여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 인적자원 확보, 능력발전, 유지, 보상 등 인사관리에 대한 기능을 부처의 협조 하에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 인사기관의 결정과 집행의 행위는 행정수반의 승인과 검토의 대상이 된다.

- ①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아 정치적 중립성과 공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 ② 인사기관의 구성방식을 통해서 인사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 ③ 합의에 따른 결정방식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④ 한 명의 인사기관의 장이 조직을 관장하고 행정수반의 지휘 아래 놓이게 된다.

해설

④ (○) 제시된 내용은 중앙인사기관이 행정수반에 의해 임명된 한 명의 기관장에 의해 관리되는 비독립·단독제형 중앙인사기관이다.

①②③은 아래 내용의 독립·합의제형에 대한 설명이다.

- ① **엽관주의적 영향력 배제, 인사행정의 정치적 중립, 실적제 발전에 유리.**
- ② 합의체 구성원 임기를 서로 엇갈리게 하여(staggering term, 임기시차제). 인사행정의 **계속성·일관성 확보**
- ③ 합의제에 의한 **신중하고 공정한 의사결정**(1인에 의한 전횡·독단 방지)

답 ④

독립·합의제형 중앙인사기관과 비독립·단독제형 중앙인사기관		
구분	독립·합의제형	비독립·단독제형
의의	중앙인사기관이 일반행정부처에서 분리되어 있고 행정수반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진 합의체로 구성	중앙인사기관이 행정수반에 의해 임명된 한 명의 기관장에 의해 관리됨.
사례	미국 실적제도보호위원회(MSPB ; Merit System Protection Board) 영국 인사위원회(CSC ; Civil Service Commission), 일본 인사원	미국 인사관리처, 영국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 일본 내각관방의 내각인사국, 프랑스 인사행정처(총리 직속), 우리나라 인사혁신처(국무총리 소속)
장점	① 엽관주의적 영향력 배제, 인사행정의 정치적 중립, 실적제 발전에 유리. ② 합의체에 의한 신중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1인에 의한 전횡·독단 방지), 중요 이익집단 대표자를 참여시켜 인사행정에 대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균형 있게 수용 가능. ③ 합의체 구성원 임기를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인사행정의 계속성 확보(staggering term, 임기시차제). ④ 단독책임자가 아닌 여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므로 다른 기관과의 밀착이나 소원한 관계를 방지하고 입법부나 일반 국민 및 행정부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음.	① 한 사람이 단독으로 인사행정의 수행하므로 인사행정의 책임소재 명확화. ② 단일 지도층으로 형성되므로 중요 인사정책의 신속한 결정 가능. ③ 행정수반이 인사행정을 관리도구로 삼아 신속하고 강력한 정책추진 이 가능하므로 능률적 행정 수행. ④ 일상적 행정의 필요성과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 가능.
단점	① 인사행정의 책임소재 불분명과 책임전가. ② 합의에 따른 시간 소요로 인사정책 결정의 지연. ③ 독립합의형의 목적은 엽관주의 방지이므로 인사행정의 적극화나 전문화 곤란. ④ 구성원이 양당적 또는 초당적 비전문가이므로 전문적 인사문제를 다룰 때 비능률성·비합리성 우려. ⑤ 행정수반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므로, 행정수반이 인사관리수단을 확보하지 못해 자신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곤란함. ⑥ 일상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행정부로부터 인사권이 분리되어 있고, 합의제 형태의 조직구조이므로 일상적 행정의 필요성과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 곤란.	① 단독제 기관장의 독선적·자의적 결정에 대한 통제 곤란. ② 인사행정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결여로 인해 인사행정의 엽관화·정실화 우려. ③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인사행정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인사행정의 일관성·계속성 결여. ④ 행정수반이나 내각에 소속되므로 양당적이거나 초당적인 문제를 적절히 반영하기 곤란.

* 일본 중앙인사기관의 변천 : 총무청 인사국 ⇨ 총무성 인사은급국(2001년) ⇨ 내각관방 내각인사국(2014년. 간부인사의 일원적 관리, 인사원 및 총무성이 맡아온 공무원 채용시험 및 연수기획, 기구의 신설·개편, 정원관리 등 인사행정 사무를 일괄적으로 담당)

12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카플란(Kaplan)과 노턴(Norton)은 균형성과표(BSC)의 네 가지 관점으로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재무적 관점, 학습과성장 관점을 제시하였다.
- ② 민츠버그(Mintzberg)는 조직의 5개 구성 요소로 전략적 최고 관리층, 중간계선관리층, 작업층, 기술구조, 지원막료를 제시하였다.
- ③ 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는 부하의 성숙도가 높은 경우 지시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 ④ 베버(Weber)는 법적·합리적 권한에 기초를 둔 이념형(ideal type) 관료제의 특징으로 법과 규칙의 지배, 계층제, 문서에 의한 직무수행, 비개인성(impersonality), 분업과 전문화 등을 제시하였다.

해설

③ (×) 지시적 리더십 ⇨ 위양형[위임형](delegating) 리더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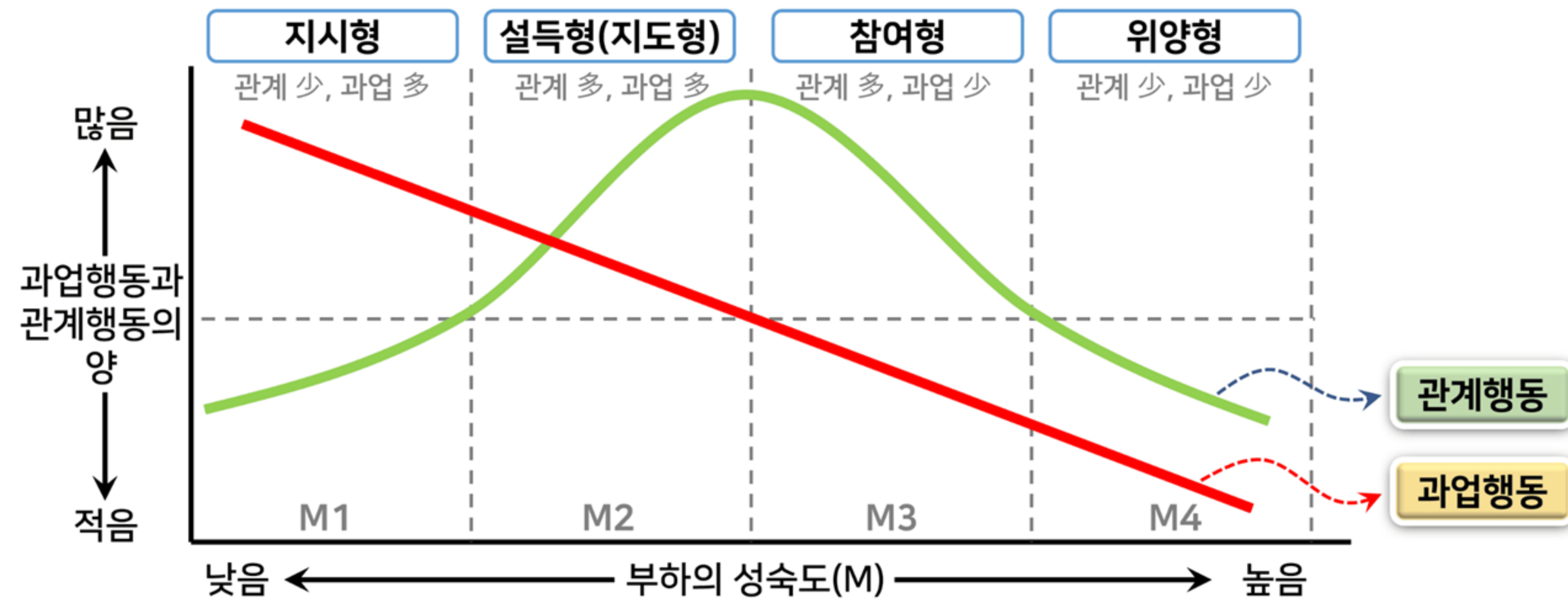
■ 허쉬·블랜차드(P. Hersey & K. Blanchard)의 3차원 리더십 효과성 모형

- ㉠ 부하가 미성숙하여 능력과 의욕이 낮은 경우(M1) ⇨ **지시형(telling)** 리더십(높은 지시적-낮은 지원적 행동)
- ㉡ 부하가 점차 성숙해지면서 인간중심의 리더 행동을 확장.
 - ㉢ 능력은 없으나 의욕이 높을 경우(M2) ⇨ **설득형(selling ; 지도형)** 리더십(높은 지시적-높은 지원적 행동)
 - ㉣ 능력은 있으나 의욕이 낮을 경우(M3) ⇨ **참여형(participating)** 리더십(낮은 지시적-높은 지원적 행동)
- ㉤ 부하의 의욕·능력이 모두 증가하여 완전히 성숙된 경우(M4) ⇨ 일 중심과 인간 중심의 리더 행동을 모두 줄이고, 단순한 충고자 역할 ⇨ **위양형[위임형](delegating)** 리더십(낮은 지시적-낮은 지원적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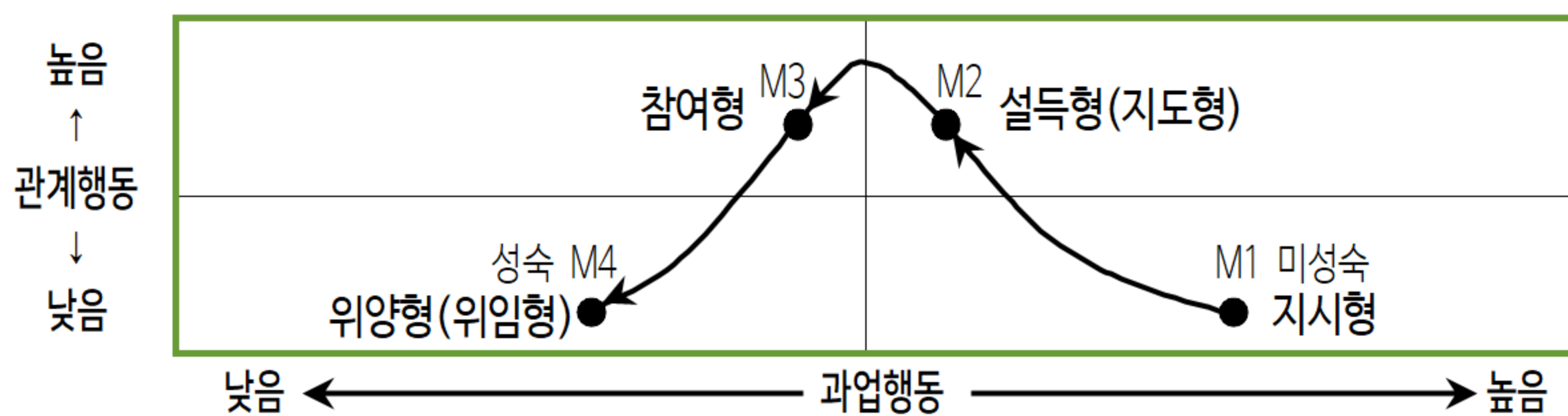
답 ③

※ 허쉬·블랜차드(P. Hersey & K. Blanchard)의 3차원 리더십 효과성 모형(Tri - dimension Leader Effectiveness Model, 1988)

- ① leader의 행동을 과업행동(task behavior ; 지시적 행동)과 관계행동(relationship behavior ; 지원적 행동)으로 구분하고, 부하의 성숙도를 상황변수로 채택하여 3차원적인 상황적 리더십이론을 주창. 부하가 성숙해 감에 따라 리더의 행태도 달라지므로 생애주기론, 성장순기론이라고도 함.
- ② **임무중심(1차원) + 인간중심(2차원) + 효율성 국면(3차원-부하의 성숙도)** 추가(지도유형이 상황에 적합할 경우 효율적임)
- ③ **부하의 성숙도(리더십 유형을 결정하는 유일한 독립변수)** : 부하가 특정과업을 성취하려는 적극성과 능력의 정도. 부하의 상대적 독립성.
 - ㉠ 직무상 성숙도(job maturity) : 능력 - 부하의 과업관련 기술과 기술적 지식의 정도
 - ㉡ 심리적 성숙도(psychological maturity) : 의욕·동기 - 부하의 자신감과 자존심의 정도
- ④ 효과적 지도자는 행위양식을 상황과 추종자의 요구에 맞도록 변화시켜야 함. 구성원의 성숙수준에 따라 리더십이 행사되어야 함(높은 관계지향과, 높은 과업지향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님).
 - ㉢ 부하가 미성숙하여 능력과 의욕이 낮은 경우(M1) ⇨ **지시형(telling)** 리더십(높은 지시적 - 낮은 지원적 행동)
 - ㉣ 부하가 점차 성숙해지면서 인간중심의 리더 행동을 확장.
 - ㉤ 능력은 없으나 의욕이 높을 경우(M2) ⇨ **설득형(selling ; 지도형)** 리더십(높은 지시적 - 높은 지원적 행동)
 - ㉥ 능력은 있으나 의욕이 낮을 경우(M3) ⇨ **참여형(participating)** 리더십(낮은 지시적 - 높은 지원적 행동)
 - ㉦ 부하의 의욕·능력이 모두 증가하여 완전히 성숙된 경우(M4) ⇨ 일 중심과 인간 중심의 리더 행동을 모두 줄이고, 단순한 총고자 역할 ⇨ **위양형(위임형)(delegating)** 리더십(낮은 지시적 - 낮은 지원적 행동)
- ⑤ 가장 이상적인 리더의 행동은 부하에게 책임을 위임해 스스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 즉, 리더는 부하의 성숙도가 높아지도록 노력해야 함.



부하의 성숙도	M1	M2	M3	M4
직무상 성숙도(능력)	낮음	낮음	높음	높음
심리적 성숙도(의욕·동기)	낮음	높음	낮음	높음
적합한 리더십 유형	지시형	설득형(지도형)	참여형	위양형(위임형)
* () 안은 관리미이론의 경우	(9, 1)	(9, 9)	(1, 9)	(1, 1)



13 지방분권화가 확대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생적 발전전략에 기반한 도시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 ② 중앙집권 체제가 초래하는 낮은 대응성과 구조적 부패 등은 국가 성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③ 사회적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진 국가에서는 지역 간 평등한 공공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④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정부혁신이 강조되고 있다.

해설

- ① (○) 외부 제조기업 유치 등 외부 주체 및 자원에 의존한 외생적 발전전략은 지역 문제를 개선시키기 보다는 도시와의 격차를 확대시켜왔다. 초기에는 외생적 발전전략이 성과를 가져왔으나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자생적 발전 잠재력 훼손, 환경파괴, 소득의 외부유출 등 다방면에 걸쳐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내생적 발전전략은 지역 자원을 발전의 원천으로 하여 지역 내 기업이 정신 고취, 역량 강화를 통해 낙후지역의 잠재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전략이다. 즉, 경제적·사회적으로 통합적인 발전을 추구하며 발전의 동력을 지역 내에서 찾아 최대한 활용함과 동시에 그 성과가 지역 내에서 순환되도록 하는 전략이다. 최근에는 지역내부의 자원만으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지역 내부의 자원과 함께 외부의 자원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인 신내생적 발전전략도 출현하였다.
- ② (○) 중앙정부의 집권적 행정체제에 의한 획일적 운영에 따른 문제점들로 인해 지방분권화의 필요성 부각.
- ③ (×)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운영시 자치단체의 역량·재정력 등의 차이로 인해 지역 간 격차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간 격차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행정방식이나 중앙정부(국가)에 의한 조정이 요구된다.
- ④ (○) 신공공관리론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재분배 차원에서 신지방분권을 강조한다. 지방정부의 재정사업 재량을 확대하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 책임지도록 한다.

답 ③

14 모건(Morgan)이 제시한 조직의 8가지 이미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문화로서의 조직(Organizations as Culture)
- ② 적응적 사회구조로서의 조직(Organizations as Adaptive Social Structure)
- ③ 심리적 감옥으로서의 조직(Organizations as Prison Metaphor)
- ④ 흐름과 변환과정으로서의 조직(Organizations as Flux and Transformation)

해설

• Morgan의 조직 메타포 분석기준 : ① 기계(Machine), ② 유기체(Organism), ③ 두뇌(Brain), ④ 지배도구(Instruments of Domination), ⑤ 문화(Culture), ⑥ 정치체계(Political System), ⑦ 심리적 감옥(Psychic Prison), ⑧ 흐름·변환과정(Flux, Transformation)

답 ②

모건(G. Morgan)의 조직에 관한 8가지 시각

1. 의의

모건은 역사적 시각과 종단면적 분석에 집착한 A. Scott 조직이론 분류방식(개방·폐쇄/합리·자연)과는 달리 횡단면적·비교적 맥락에서 조직이론을 분류. 사회현상 속에서 조직을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하고 들여다보는 시각과 관련된 비유인 조직 메타포(은유, metaphors)라는 방법을 통해 여덟 가지 조직 이미지를 제시.

2. Morgan의 조직 메타포 분석기준(2006)

구분	주요 개념	핵심 특성
기계 (Machine)	• 조직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같은 존재 예 프레더릭 대왕의 프로이센 군대조직, F. Taylor의 과학적 관리론, H. Fayol의 일반관리원칙, M. Weber의 이념형 관료제, TQM, MBO, MIS, 리엔지니어링 • 한계 : 인간의 역량을 제한, 할거주의 초래, 반혁신적, 정보의 왜곡, 새로운 문제의 무시, 훈련된 무능	목표지향·효율성·짜임새
유기체 (Organism)	• 조직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간주. 조직생존, 환경과의 상호작용 강조. 예 Maslow 위계이론, 상황적합이론, 조직생태학, 매트릭스조직, 인적자원관리 • 한계 : 조직이 언제나 통합적이고 기능적인 결합체는 아니며, 유기체로서의 조직 이미지가 규범적 지침으로 기능할 경우 인간을 조직에 의해 동기부여되는 대상으로 여길 수 있음	환경적응 생존·성장
두뇌 (Brain)	• 조직을 유연하고 홀로그래픽적인 정보처리시스템 으로 봄. 조직은 합리적인 시스템으로서 표준절차, 기계적 구조, 명확한 목표 하에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작동. 예 제한된 합리성, 정보처리체계, 학습조직, 홀로그래픽 조직, 계량경영학 기법 • 한계 : 규범적 차원에서만 작동, 내부의 권력과 통제를 도외시, 내부의 저항 초래 가능성	창의성 네트워크
지배도구 (Instruments of Domination)	• 지배계층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피지배계층을 조종하고 착취하는 존재 로서 조직을 인식. 정치적 존재로서의 조직 이미지와 유사하나 권력의 행사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간주. • 한계 : 음모이론과 연계(근원적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 지배도구가 아닌 형태의 조직도 있음, 너무 이념적임.	억압·통제
문화 (Culture)	• 조직은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도구적 존재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적 실체 • 조직관리가 규범, 가치, 전통 및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음. 조직 문화가 조직의 특징을 결정하므로 조직문화의 정합성 확보가 변화관리의 성공으로 이어짐. • 한계 : 맹목성 혹은 자문화 중심주의(ethnocentrism) 초래.	가치·이념 신념
정치체계 (Political System)	• 조직은 상호 대립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세력의 경쟁과 갈등의 장이자 타협을 이루어가는 장 (조직 합리성의 한계를 조명) • 한계 : 조직의 모든 행동이 정치적 결과물은 아니며 합리적 결정이나 우연에 의해 결정되기도 함	갈등조정 권력배분
심리적 감옥 (Psychic Prison)	• 구성원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속에 갇혀버리는 상태로, 조직 행태를 합리성뿐만 아니라 무의식(unconsciousness) 또는 무기력(powerlessness)의 문제로 간주(예 집단사고) • 합리성과 비합리성은 동전의 양면이며 합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현상의 왜곡과 기능의 장애가 발생	폐쇄
흐름·변환과정 (Flux, Transformation)	• 조직을 지속적인 변화상태, 역동적 시각으로 봄. 왜 조직이 끊임없는 변화에 빠져있는지 실마리를 제공. • 조직변화의 원동력 : 자기생산(auto-poiesis), 카오스이론과 복잡성이론 , 순환적인 관계들(circular relations), 변증법적 논리 → 조직은 지속적인 변화에 직면	자기생산 상호연계

3. 사회이론 분석을 위한 4가지 패러다임(Burrell & Morgan, 1979)

		과학의 본질	
		주관적	객관적
사회의 성격	급격한 변동의 사회학	급진적 인간주의 패러다임(예 심리적 감옥)	급진적 구조주의 패러다임(예 지배도구)
	규제의 사회학	해석학적 패러다임	기능주의적 패러다임(예 기계·유기체·두뇌·정치체계·문화)

- ㉠ 기능 주의적 패러다임 : 사회는 구체적인 실재로서 질서와 구조, 목적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가정에 기반. 사회 안에서 인간의 존재 역할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며 본질적인 경향은 규제적이고 실용적이라는 시각.
- ㉡ 해석학적 패러다임 : 일상생활의 본질을 강조하며 경험의 이해나 세상에 대한 또 다른 시각에 기반을 둔 다양한 현실, 상호 간 공유 강조.
- ㉢ 급진적 인간주의 패러다임 : 이념적 상부구조의 여러 측면에 의한 지배로부터 인간의 인지와 의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사회 변화를 모색.
- ㉣ 급진적 구조주의 패러다임 : 구조적 갈등 및 지배양식과 모순에 의해 사회전체가 변동된다는 시각.

관련기출

1. 모건(Gareth Morgan)이 제시한 조직에 관한 여덟 가지 시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5 해경간부

- ① 조직을 기계장치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조직을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같은 존재로 취급한다.
- ② 조직을 유기체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조직을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간주한다.
- ③ 지배를 위한 도구로서 조직을 바라보는 시각은 지배계층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지배계층을 조종하고 착취하는 존재로서 조직을 인식하는 것이다.
- ④ 조직을 두뇌로 바라보는 시각을 대표하는 이론은 프레더릭 대왕의 군대조직, 페이올의 일반관리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2. 조직을 바라보는 모건(Morgan)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 국가7급 인사·조직론

- ① 정치적 존재로서 조직을 보는 관점은 조직 내 다양한 집단과 구성원들은 조직 전체 이익보다 자신들의 특수한 이해를 추구하며 다양한 세력의 경쟁과 갈등, 그리고 타협이 이루어지는 장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 ② 유기체로서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은 조직이 생명체와 같이 욕구가 있으며, 조직의 생존이 주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③ 두뇌로서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은 조직에는 두뇌 역할을 하는 권력을 가진 지배계층이 있고 조직은 지배의 도구로 활용된다고 보는 것이다.
- ④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조직을 기계장치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답 1. ④ 2. ③

15 (가) ~ (라)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 4월 (㉢)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집행, 그리고 결산 및 회계검사의 단계가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것을 예산주기 또는 예산순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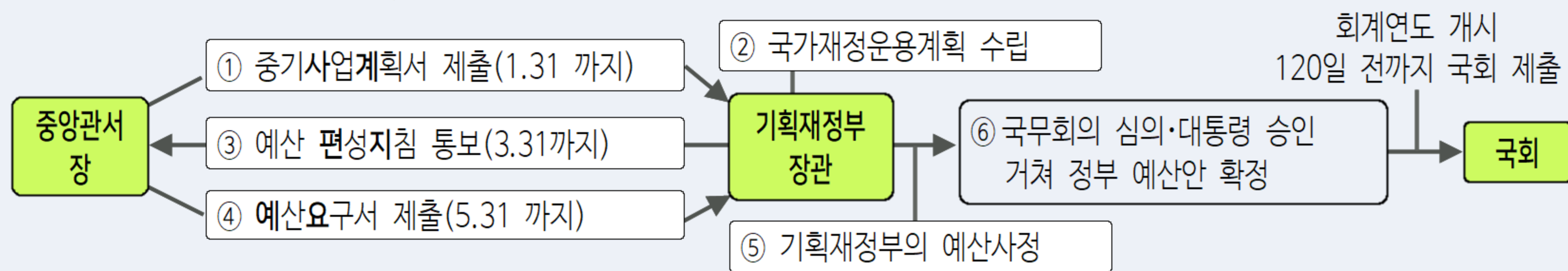
①	㉠ 10	㉡ 3	㉢ 10	㉣ 1
②	㉠ 5	㉡ 3	㉢ 10	㉣ 3
③	㉠ 5	㉡ 5	㉢ 20	㉣ 1
④	㉠ 10	㉡ 5	㉢ 20	㉣ 3

해설

이하 법률 규정은 국가재정법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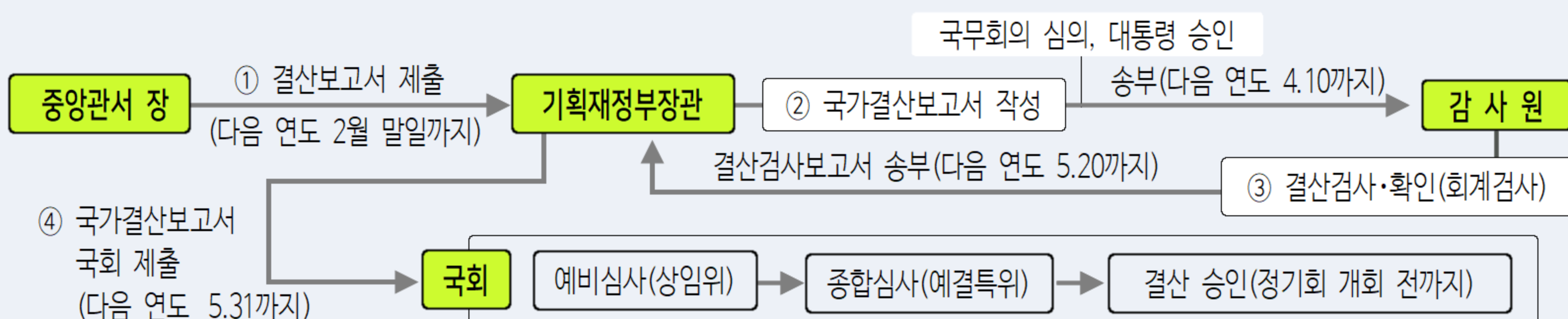
㉠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CF)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8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예산주기(budget cycle, 예산순기) : 예산과정의 4단계(편성 - 심의 - 집행 - 결산·회계검사)가 시간적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반복되는 과정 예산주기가 반복되므로 예산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여, 사업의 제안·심사에 반영하며,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우리나라의 예산주기는 3년(2022년에는 2021년도 예산의 결산, 2022년도 예산의 집행, 2023년도 예산의 편성·심의가 이뤄짐)
- 회계연도(fiscal year) : 예산의 유효기간으로서 수입과 지출을 구분 정리하여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기간.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1년(1.1.~12.31.)

예산주기(budget cycle, 예산순기) : 3년			
FY - 1년		FY(회계연도) : 1년	FY + 1년
예산편성(행정부-기획재정부)	예산심의(국회)	예산집행(각 기관)	결산 및 회계검사(기획재정부, 감사원[결산검사], 국회[결산승인])

답 ②

16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으로부터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 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 ②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단,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신고내용의 특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해설

- ①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 ② (×)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이하 각호 생략)
- ② 제1항 단서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이하 각호 생략)

☒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심사대상자 취업제한과의 부패방지법 상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구분	근거법률	대상	취업제한기관	취업제한 기간	철학적 기초
취업심사대상자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의무자(정무직, 4급 이상 등)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제한	의무론(부도덕한 동기 실현의 사전 제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자 ②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①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②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퇴직일 또는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 등으로부터 5년간 취업제한	결과주의(행위에 대한 사후적 처벌)

- ③ (○)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 ①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퇴직공직자"라 한다)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이하 "재직자"라 한다)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누구든지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④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부패행위 신고의 처리) ⑧항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항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5조(국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①항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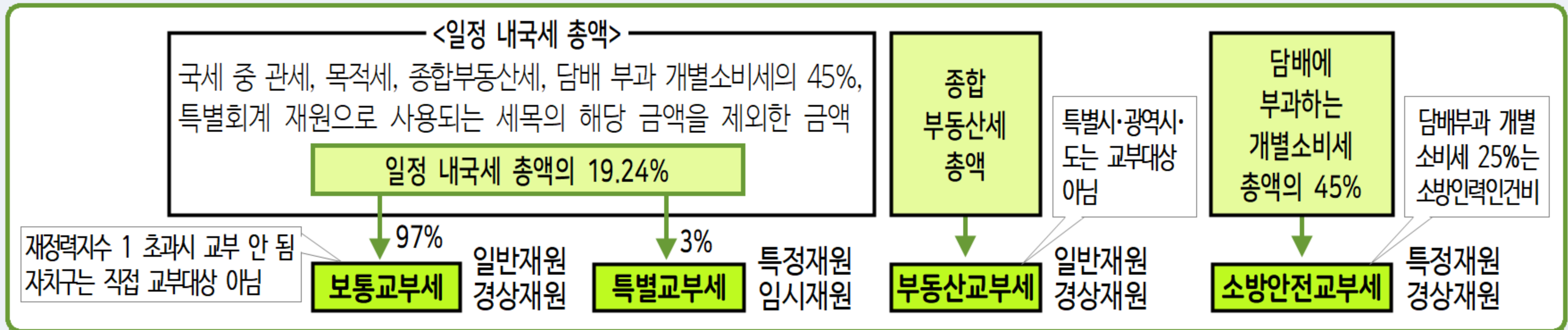
답 ②

17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교부세법 상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된다.
- ②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국가 사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거나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 ③ 조정교부금은 전국적 최소한 동일 행정서비스 수준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이다.
- ④ 지방교부세 대비 국고보조금의 비중 증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해설

① (○) • 지방교부세 종류와 재원



- ② (×)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이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균형을 위하여 국세중 일정액을 법정화하여 자치단체별 재정력을 반영하여 산정·배정하는 제도이다.
- ③ (×)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이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자 치단체가 관할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광역시나 도가 관할 시나 군에 교부하는 시·군 조정교부금과 특별시나 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교부하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있다.
- ④ (×) 지방교부세는 일반적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재원이고,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특정재원이므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약화시킨다. 재정지표상으로는 재정자주도를 낮추고 세출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은 약화된다.

재정자주도	$\frac{\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 + \text{지방교부세} + \text{조정교부금}}{\text{일반회계예산}} \times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재원 중 일반재원(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비율. •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일반재원 비중이 높을수록),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의 융통성·재량성이 높아 재정운용의 자주성을 높임.
-------	---	--

답 ①

18 전자정부법 상 전자정부 추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등교육법 상 사립대학은 적용받지 않는다.
-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전자정부의 날이 지정되었다.
- ④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정보통합 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해설

이하 법률 규정은 전자정부법 규정

- ① (×) 전자정부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는 각급학교(사립·국립·공립 포함)가 포함됨.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② (○) •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주체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주체, 수립주기	비고
해당 기관별 전자정부기본계획	행정기관등의 장이 5년마다 수립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등 : 행정기관 + 공공기관 • 행정기관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행정사무 처리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별 계획을 종합한) 전자정부기본계획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5년마다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사무관장기관 :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관위사무처, 행정안전부장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립 사례 예시>

<p>해당 기관별 전자정부기본계획 (행정기관등의 장이 5년마다 수립,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장은 기획재정부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 서울시장은 서울시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국회입법조사처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 •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국회예산정책처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 	⇒	<p>(기관별 계획을 종합한) 전자정부기본계획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5년마다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기본계획 :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 • 국회 전자정부기본계획 : 국회사무총장이 수립
---	---	---

제5조의2(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관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중앙사무관장기관”이란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법원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

③ (○) **제5조의3(전자정부의 날)** ① 전자정부의 우수성과 편리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자정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한다.

* 1967년 6월 24일 인구통계 처리용으로 경제기획원에 IBM 컴퓨터 도입. 이 날을 전자정부의 시작으로 보고 기념하기 위해 6월 24일로 지정.

④ (○) **제55조(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답 ①

19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정부가 지역주민에 대해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간접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 ②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신규사업 중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국회가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예산성과금은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 이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은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 ④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소요 기간에 관계없이 고속도로, 국도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할 것을 요구한다.

해설

① (×) 조세지출제도(조세감면)에 대한 설명임.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은 제외)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② (○)

•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초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 • 국가재정법 제4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증대된 수입)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주의 : 국가예산의 집행시 — 지출 절약 : 예산 성과금으로 사용 가능. 다른 사업에 사용 가능
수입 증대 : 예산 성과금으로 사용 가능. 다른 사업에 사용 불가(cf.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사용 가능)

cf. 지방정부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증대된 수입도 다른 사업에 사용 가능

• 지방재정법 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④ (×)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을 대상

•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액되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인 사업(*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 가.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다만, 건축사업은 제외한다.
-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 다.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 2. **건축사업 또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규모가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사업

답 ②

20 사회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자연과학의 실험실 실험과는 달리 상황에 따라 통제집단(control group) 또는 비교집단(comparison group) 없이 진행할 수 있다.
- ㉡ 진실험 방법을 활용하여 사회실험을 진행하면 호손효과(Hawthorne Effect)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 ㉢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정책 프로그램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 전에 그 결과를 미리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 ㉣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무작위배정(random assignment) 할 수 없어 집단 간 동질성 확보가 불가능하면, 준실험(quasi-experiment) 방법을 채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① ㉠, ㉡

②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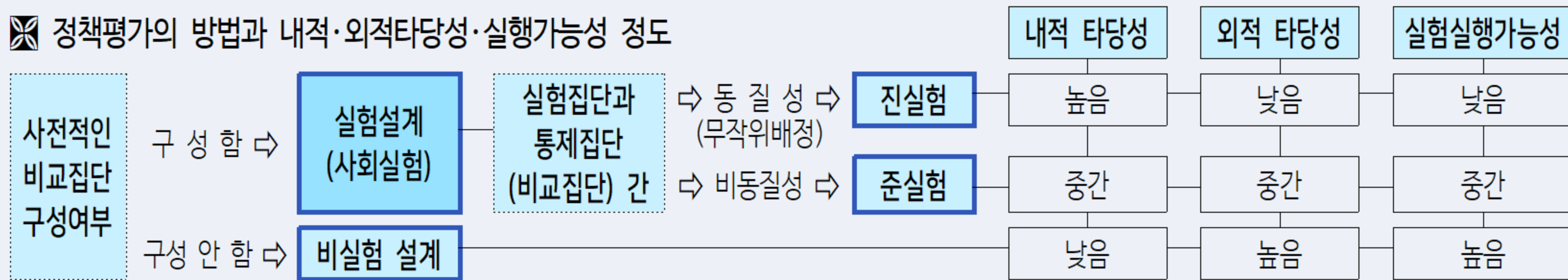
③ ㉡, ㉣

④ ㉢, ㉣

해설

- ㉠ (○) 사회실험은 실험설계에 의한 방법으로 진실험과 준실험이 있다. 사회실험은 사회라는 실험환경에서 실시될 뿐 실험의 기본원리는 자연과학의 실험실실험 원리와 같다. 실험은 반드시 실험집단과 이에 비교되는 통제집단(비교집단)을 보유한다. 의도적으로 두 집단을 나누고 실험집단에게는 일정한 처리를 가하고 통제집단에게는 처리를 가하지 않게 하여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양집단이 나타내는 결과변수상 차이를 처리의 효과로 판단하는 것이 실험의 기본논리이다.

※ 정책평가의 방법과 내적·외적타당성·실행가능성 정도



- ㉡ (×) 진실험은 동질적인 두 집단에 대해 차별적 처리를 가하므로 인위적 실험상황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대상자가 실험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연스러운 사회생활과정에서와 다른 행태를 보여 외적 타당성이 낮아지는 Hawthorn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준실험에 비해 높다.

※ 정책실험 종류별 타당도 저해요인 비교

구 분	진실험	준실험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	불균등한 상실, 오염효과(모방·누수·부자연스런 반응)	성숙효과, 사건효과, 선정효과
외적 타당도 저해요인	호손효과, 표본의 대표성 부족,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크리밍 효과

- ㉢ (×) 정책평가는 정책의 집행 도중 또는 종료 후에 집행과정이나 정책결과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적·지적 활동이다. ㉠ 정책수단과 정책목표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검증하려는 활동 또는 ㉡ 정책의 내용이나 집행 및 그 영향을 정책목표와 관련해서 객관적·체계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이다. 사회실험은 정책평가의 방법으로서 사전적으로는 정책실시 이전에 대안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거나 사후적으로 정책실행에 따른 효과가 나타났는지 검증한다.
- ㉣ (○) 진실험은 모집단에서 무작위 선발·배정을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하여 구성하지만 양 집단간 동질성 확보가 불가능하면 준실험이 활용된다.

답 ④